학술회의 총서 2001-03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제10차 한·중워크샵(2001.6.4) 발표논문집

통 일 연 구 원

○본 자료는 2001년 6월 4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차 통일연구원-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차 례

학술회의 총서 01-03

◆ 주 제 :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개 회 사
축 사

<제1회의: 동북아 안보정세>

1. 동북아 안보정세와 강대국간의 관계 / 3

歐陽立平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2.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미관계 / 9

席來旺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3.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상 / 18

이헌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32

<제2회의: 중·미의 한반도정책>

1. 중국과 한반도: 한국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한반도정책 / 47

신상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대북정책 / 56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 63

<제3회의: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

1. 중국의 안보정세 인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79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중·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 97

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 **토 론** / 103

개회사

존경하는 타오젠(陶堅)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중국대표단 여러분!

제10차 한·중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곳 서울까지 왕림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와 저희 통일연구원이 학술교류를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두 연구기관은 학술교류의 기회를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 왔고, 이러한 학술교류 활동은 한·중간 신뢰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뜻깊은 제10차 한·중 학술회의를 저희 연구원이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MD)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만에 대해 키드급 구축함 등 첨단군사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안보관계를 강화하여 세계질서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로 중·미간 안보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문제, 대만문제, 티벳문제 및 미·일동맹 강화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한

반도전략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의 소지를 덮어두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함으로써 다시 동반자관계로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서도 화해·협력 분위기가 정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투명성과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 말기 급속하게 진전되었던 북·미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등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중 학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개진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중수교 1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진정한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통일연구원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두 연구기관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기간중 성의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타오젠 부소장님을 비롯한 중국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

로 환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원장 서병철

축 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를 대표하여 통일연구원과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중국측 연구진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환경이 너무나 좋은 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첫 해에 한국이나 중국만큼 통일을 논의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우리 한국과 중국 민족의 피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연구원 여러분의 업무와 연구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문제와 대만해협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문제의 변화방식이나 방향,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북 관계나 이해 당사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통일문제를 처리할 때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국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통일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연구소에서는 통일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방향과 방침에서 보았을 때 대미 관계개선은 우리 나라 외교정책의 핵심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적대국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장쩌민 주석은 대만문제가 해결되면 중·미 협력에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외교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21세기의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 원장님께서도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주제는 이러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서 원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많은 기대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陶 堅

제1회의: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안보정세와 강대국간의 관계

歐陽立平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오랫동안 동북아지역의 안보정세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음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이 지역의 핵심지대에 속하는 한반도 남북한의 장기 분열로 인한 적대와 불신임 관계이며, 또 하나는 남북한 안보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받는 이 지역 대국 관계의 변화, 특히 중·미의 전략과 안보이익에 대한 조정과 변화이다. 이 두 가지 안보 구조는 서로 영향을 미치나, 그 중에서도 미·북관계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지역에는 미·중·러의 핵대국과 미·일 세계경제대국, 미·러 세계군사대국이 모여있다. 이렇게 복잡한 지역안보 외에도, 남북한의 50년에 달하는 분단과 정전협정,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문제, 뿌리깊은 냉전사고방식, 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 핵확산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어떤 문제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으며,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는 순조롭게 해결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합심 협력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미·북관계, 중·북관계, 남북관계, 중·미관계 등의 어떤 미묘한 변화도 이 지역의 안보 형세와 한반도 관계의 향방에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1999년부터 동북아 안보 형세에 몇 가지 좋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몇 가지 관계의 변화로서 미·북관계의 전환점 출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북한의 대외 정책 조정 등이 그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북관계는 한반도 정세 발전의 결정적 요소이다.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위기들은 대부분이 미·북간의 심각한 대립에서 초래한 것이며 결국에는 미·북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소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 3월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이후 미·북관계는 갑자기 경색되었으며 한때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당시 주석이 핵개발 동결을 약속하며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의향이 있다고 밝혀 전쟁의 그림자가 물러간 적이 있다. 김정일이 통치를 시작한 후, 미·북은 북한의 위성시험발사 문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금창리 지하핵시설 등의 문제로 격렬한 갈등을 겪었으며 한반도 분위기도 극도로 긴장되었으나, 결국에는 양국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하였다. 클린턴 정부의 두번째 임기 말기 무렵, 미국은 북한과 미래지향적인 접촉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제시한 북한과의 건설적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받아들였다. 1999년 9월 북·미는 베를린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 동결 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미·북간의 무역과 투자 허용, 적대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등을 약속하였다. 2000년까지 미·북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작년 10월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미·북관계는 최고조

에 달하였으며 한반도가 한때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 특히 미·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조정하여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더욱 포용적인 햇볕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일련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소하고 민족화해와 경제교류에 주력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6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8월, 남북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재가동하였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첫 동시상봉이 이루어졌다. 양국 관계는 이미 평화통일을 향한 건전한 발전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북한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각국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 추진으로, 2000년 5월 김정일의 방중, 6월 남북정상회담,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10월 미 국무장관의 방북, EU 의장의 방북 등이 그 예이다. 2000년 4월, 북·일은 외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해 새로운 수교회담을 가졌으며 1998년 위성시험 발사문제로 악화되었던 분위기가 크게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이탈리아, 캐나다,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거나 수교를 맺었으며 EU와도 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등 서방국가와의 교류 경로를 확대하였다. 북한은 또 비동맹그룹 장관회의, 제1차 개발도상국 정상회담,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도 참가하였다.

2.

대국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미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미관계가 평화공존, 상호협력 관계라면 주변국가 특히 중간에 끼어 있는 일부 소국들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나타난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심지어 부분 충돌까지 일어나면,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중국에는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중·미관계는 지금 매우 미묘한 상태이며, 단순히 '좋다', '안 좋다'는 말로 정의내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공존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기로 하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대항한다. 이렇게 방대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서 중·미관계의 협력과 대항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끊임없는 태도 조정을 하고 있다. 양국은 어디가 마지노선인가를 모두 명확히 알고 있다. 중·미관계는 기복이 심하여 중·미와 일정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에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가 둘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중대한 시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중·일관계는 중·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일본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마땅히 독립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본은 냉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의 뒤를 쫓고 있다. 자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타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일·미 안보조약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이는 누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다. 많은 미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은 미·일 안보조약이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것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이 군비경쟁에 휘말리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중·미관계가 악화되면 중·미는 각 방면에서 잠재력이 큰 만큼 감당능력도 크다. 그러나 일본과 한반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러관계, 미·러관계, 러·일관계 그리고 그들과 한반도의 관계, 중·한과 중·북 등 관계의 변화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 이치와 결과 그리고 미치는 영향은 똑같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겠다.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미사일방어체제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이 T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소국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독립 자주적인 입장은 중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의 외교가 성숙하였음을 의미하며, 국제정세와 지역안보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MD가 어느 지역에 구축되든 이는 현재의 국제평화 발전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동아시아에 TMD를 구축하려는 이유로 미국의 해외주둔군 보호와 동맹국 보호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일본, 대만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미국이 보내는 정치적 신호에 불과하다며 즉 인위적으로 일부 국가와 다른 국가간의 모순을 심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미국의 동기는 천하가 혼란스러워지면 같은 지역에 있는 대립국들이 모두 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고 동시에 안보면에서 타국의 주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TMD를 반대한다. 중국이나 북한이 TMD가 지역전략균형을 깨뜨리고 국가안보이익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적어도 중국측은 어쩔 수 없이 입장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대만문제는 동북아 안보 형세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대만은 비록 동북아지역에는 속하지 않으나 중·미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TMD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대만문제는 중·미관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대만의 방자함과 미국의 고의적인 도발 및 대만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일본의 이에 대한 협조적인 행동들은 이미 국면을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왔다. 그 수위가 높아지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동북아지역의 모든 국가는 패자가 될 것이다. 관련 국가들도 아마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요행심리를 가지고 여전히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과 자국 국민 나아가 지역안정과 국제평화에 있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미관계

席來旺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부시 행정부는 출범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실력외교 주장, 냉전색채 농후, 자국이익 강조, 일방주의 성행 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대중정책에도 주목할만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

미국정치의 기본 규율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은 일단 취임을 하면 대선 기간의 과격한 발언을 수정하고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 나간다. 그러나 취임후 부시 행정부의 외교행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규율을 깨고 있다.

우선, 대중정책 정립을 수립하면서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중·미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경쟁은 꼭 적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미국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을 분명히 제일의 전략적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앞

으로 중국과 접촉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방어와 제약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군사전략 조정과 국방건설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점점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미 군사전략목표를 동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으며, 부시는 미·일관계 강화, 대만에 대한 정책과 입장 수정, 인도와의 관계 발전, 몇몇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재개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에서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 국내에서도 일부는 NMD 구축은 소위 불량국가들이 아닌 중국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 연해지역에 대한 군사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찰기 충돌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찰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일부 문제에서 중국에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 첫째, 인권카드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에 대한 공격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제네바 인권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의 대중국 인권비난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올해도 인권을 들먹이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국에는 연속 10번째로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둘째, 정찰기 충돌사건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였다. 셋째, 대만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만당국과 분열세력 지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부시는 대선 당시 이미 대만의 안보와 이익에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재임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대만의 방위를 돕겠다'고 한 부시의 발언은 중·미 양국의 수교이래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는 '삼불(三不)'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대만의 미래는 대만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여러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17 공보'의 약속을 어기고, 4월 24일 대만에 첨단 공격무기 판매를 결정하였다. 리덩후

이(李登輝)의 방미 허용, 천수이볜(陳水扁)의 미국 경유와 미 의원과의 접촉 등 미국과 대만의 정부 접촉은 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은 중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대중정책을 결정하였다. 즉 '접촉'과 '제약'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2.

미국의 대중정책 조정 추세를 보면, 미국이 중국과의 '접촉' 속에서도 '제약'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미 양국은 적지 않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존중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때문에 중·미관계의 발전 추세는 전반적으로 기복을 이루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미관계를 안정시키며 양자관계의 발전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며, 중·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대중정책도 이러한 기조를 바꾸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중·미관계의 근본 기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 기간 동안, 대중정책은 늘 논쟁을 유발하는 정책 의제였으며 대통령 후보자가 표를 끌어들이는 카드였다. 그러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문제는 의제로도 카드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당 후보가 대중정책에 의견차이를 보이긴 하였지만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였고 중국의 WTO 조기 가입을 주장하며 중국과 계속 접촉하는 데 찬성한 것이다.

부시는 비록 중·미관계를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내렸지만 이는 중·미관계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협

력을 필요로 하며 심지어 미국의 안보와 번영도 중·미관계의 발전 상황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며 유해한 것이다. 중·미간의 '전략적 대항'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미관계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양국간에는 많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부시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으로 중·미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부시의 대중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크게 동떨어질 수 없으며, 중·미간에 체결한 세 개의 공동성명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대중정책에 있어서 미국 고위층은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① 중국의 성장에는 강력한 내적 동력이 작용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외부세력도 중국의 역사적 발전을 막을 수 없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며, 새로운 세기의 세계구도와 아시아와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미관계는 미국의 양자관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중·미협력은 중·미간의 직접 충돌보다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되며, 미국은 중국과의 접촉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날로 밀접해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부시의 대중 강경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며, 미국은 양국간의 공동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② 중국의 '서구화'와 국제체제 편입은 중국의 성장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여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 사회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국제기구와 미국의 주도하에 제정된 국제규약의 제약을 더욱 많이 받게 함으로써 중국을 책임있는 국가로 변화시킨다. 중국을 서구가 주

도하는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정치체제에 끌어들여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이 정한 게임의 법칙으로 중국을 구속한다.

③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으며, 중국을 고립시키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고립될 것이다. 중국과 경솔히 대항해서도 안 된다. 대항은 두 나라에게 모두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과 이상을 위해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깊은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무턱대고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계속 접촉해야 하며, 중국,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대항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셋째, 미국이 현재 대만정책을 조정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 양당의 과거 6명의 대통령이 대중정책에서 이룬 가장 큰 공감대이며, 중·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반이다. 비록 부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양안관계의 균형 유지를 희망하였지만 이는 부시에게 '대만 방위 협력' 문제에 있어 더 많은 활동 여지를 남긴 것으로, 즉 필요시에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는 큰 틀로 대만 방위에 대한 약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은 아주 복잡한 태도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독립도 통일도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원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린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대만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은 미국의 현행 양안정책과 대립되는 것이며, 대만문제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의 유지가 아마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세력이 전쟁을 일으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양안의 안정 유지에서, 중·미 양국의 목적은 다르

지만 제한적인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극단적인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문제로 중·미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직 대만을 위하여 중국과 전쟁을 할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최근 부시의 대만 방위 협력에 관한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그의 발언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부시의 이런 발언은 대만정책에 관한 그의 개인적인 의사이지 결코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다. 부시의 발언 후, 국방장관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들과 논의도 없었다는 데 불만을 표하였다. 게다가 부시는 그후 언론과의 대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천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의 말에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파병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미관계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미국인은 대만을 위한 희생을 결코 원치 않는다. 미국 CATO 연구소에서 최근 작성한 보고서는 대만방위는 미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대만 방위에 대한 최대 협력 발언은 미국을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미국은 대중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미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 부시의 대중정책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근래에 중국에 보인 강경한 태도는 정책적인 '시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부시는 여전히 하반기에 방중을 희망하며,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미간에 여전히 협력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하루빨리 WTO에 가입하길 원하여 WTO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 국회에서는 중국에 PNTR 지위 부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미 통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찬성한다. 5월 8일 부시는 연설 중에 다시 한 번 중국을 신흥대국이라고 일컬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3.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다. 그리고 중·미관계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협력은 곧 이익이고 충돌은 곧 손해이다. 때문에 대항을 포기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현실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중·미관계는 세계평화와 발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미관계의 핵심은 대만문제이다. 대만당국의 지도자가 완고하게 '대만독립'을 고수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부단히 대만에 선진 무기를 판매하며 분열 세력을 지지하는 데 있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판매를 독립에 대한 지지 신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무기'만으로는 대만 독립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무력으로 통일을 반대할수록 평화 통일의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무기 판매와 무기 구입은 대만해협의 안보를 유지하는 근본 방법이 될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야말로 가장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미관계와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중·미관계 변화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만안보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국제사회에 밝혀야 할 것은 대만해협의 긴장국면은 대만독립세력의 분열행위가 야기한 것이며, 새로운 대만 지도자가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만독립론은 대만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만안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만해협에 아직까지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일부 세력들의 무책임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만문제의 국제화는 현재 대만당국의 중요한 정책 방침이며, 국제사회의 더 많은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 국제세력은 중국 견제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는 대만 독립에 대해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만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만해협 정세에 대한 간섭은 실제로는 대만의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

즉 대만해협의 영구적인 평화 유지는 양안과 국제사회에 모두 유리하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이성적으로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것이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61개 국가들은 모두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처리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반영한 많은 수교 공동성명과 관련 의제에 관한 양자간 정치, 안보, 경제 협정은 이미 오늘날 국제질서와 아·태지역 안보를 수호하는 국제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대만독립시도는 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문제를 심사

숙고하여 다뤄야 한다. 그리하여 '대만 독립'의 확산을 막고 실질적으로 대만의 안전, 평화 그리고 안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상

이헌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 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의미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국제질서 하에서 평화는 힘과 함께 그리고 군대는 평화유지의 강력한 방패이자 확실한 칼임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현실주의 외교', '힘을 통한 평화', '우방과의 신뢰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적 국제주의 노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고, 위기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맹국을 도우며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려 한다. 반면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대국과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민주세계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법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을 후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상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도

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돕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면 협상을 하되 불응하면 응징을 가하는 공격과 나쁜 신조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노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속에 안보전략의 핵심은 첫째, 안보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둘째,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戰力投射) 능력을 강화하며, 셋째,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주공간의 무기화를 구축하려 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윈·윈(Win-Win) 전략을 포기하고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감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전략 구상을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으로 여기고 있다.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 구상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및 미사일방어체제를 분석하고 관련국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안보전략

그 동안 미국은 전략의 무게 중심을 유럽대서양 쪽에 두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역점을 두려 한다. 이미 미

국방부는 'Joint Vision 2020'를 통해 미국의 방위전략의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려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어 왔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유럽에 두었던 군사적 비중을 이 지역으로 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태평양 해역에 공격용 잠수함 증강 배치, 아시아 지역군사훈련 확대, 아시아 중점 전략연구, 역내 미군주둔형태 변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 중심의 개념과 함께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는 대신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향상시킨 '신속배치 전력'(Rapid Deployment Forces)을 구성, 분쟁지역에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무기의 개발로 미군의 기동성이 굉장히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중국·북한 등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이 바다를 끼고 있어 육군보다는 해·공군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기지를 비롯해 전방배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의 공격권에 들어오는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스텔스 폭격기, 무인항공기, 잠수함 등 공군과 해군의 장거리무기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1] 게다가 미국은 디지털·정보·사이버 시스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며,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력 기동성을 경량화하려 한다.

해·공군의 역할 중시와 전력 기동성의 강화와 함께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적용돼 왔던 중동과 아시아 등 두 지역에서 대규모 동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Win-Win 전략을 폐기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육군

1) *New York Times*, May 17, 2001.

위주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한 것으로 해·공군의 역할이 중시되는 디지털·정보·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개방의 사회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탄도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위협의 증대, 개인이나 집단의 핵·생물·화학 무기를 사용한 테러와 공격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2]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형태의 위협이 예측 가능한 군사강국보다는 오히려 불량국가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반확산'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비확산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반확산은 군사적 해결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기술이전 통제와 경제·외교 제재·교섭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고 반면 후자의 정책은 상대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해 올 경우 군사적 대응을 조치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보며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 5,400개, B-2 및 B-52 폭격기에서 발사 태세에 있는 핵폭탄·크루즈미사일 1,750개, 전술 핵무기 1,670개, 미국 주변의 지하벙커에 있는 핵탄두 1만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3]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에 따라 전략핵탄두를 3,000~3,500개까지 줄이기로 한 바 있다.[4] 아직 START Ⅱ

2) "Text: Rumsfeld Testifies on Need for New Strategic Framework," *Washington File*, June 21, 2001.
3) John Barry and Evan Thomas, "Dropping the Bomb," *Newsweek*, June 25, 2001.

는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의 전반적인 감축 방침과 함께 전략핵탄두 감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전략핵탄두를 현재의 7,200개에서 2,500개 이하로 줄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MX 핵미사일 50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5)]

미국은 전략핵탄두 감축을 계속하면서 새로이 인지되는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회상컨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략은 예측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공격이 우발적, 자살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1세기 신국제질서 하에 미국이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가로 여기면서 '동등한 경쟁국'으로 부상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떠오르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1세기에 반미적인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비가 현재 GDP 4~5%에 해당되지만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크게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사비가 증대되면 중국의 전반적 군사력이 증강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은 더욱 팽창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수위의 군사력을

4) Jim Wurst and John Burroughs, "Ending the Nuclear Nightmare: A Strategy for the Bush Administration," *World Policy Journal* (Spring 2001), p. 35.

5) *New York Times*, June 28, 2001. MX 미사일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격납고를 파괴할 능력을 갖춘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이는 1980년대 미국 전역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미사일을 폐기하려면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법 개정에 의해 MX 미사일에 탑재된 500개의 핵탄두 모두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6,700개의 전략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

지닌 중국이 급속히 팽창하는 경제에 힘입어 머지 않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위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중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합병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더라도 중국지도자들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미 국방부는 우주상황을 분석하면서 육지, 바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우주사령부는 현재 600여 개로 추정되는 위성이 2010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미 국방부는 자국의 상업용·군사용 위성[6]이 가상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전역이 '우주의 진주만'(Space Pearl Harbor)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주에서 군사 및 민간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활동은 새로운 도전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촉진하기 위해 취약점들에 대해 보다 세밀히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7]

대처 방안으로 미 국방부는 우주공간을 무기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탄 탐지, 추적 위성 분야에서부터 위성방어 계획, 군

6)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상업용 군사용 위성 현황은 Tom Wilson, "Threats to United States Space Capabilities," a paper prepared for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참조.

7) Remarks by Donald H. Rumsfeld on "Secretary Rumsfeld Outlines Space Initiatives," May 8, 2001.

사통신, 첩보수집, 우주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주방위전략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주에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용 위성무기'(antisatellite: ASAT)를 개발·배치하려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가상 적에 대해 위성 레이저로 적의 탄도탄 미사일을 추적·파괴할 수 있고 적의 위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전략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우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한다.

3. 미사일방어체제 구상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국방대학(2001.5.1)에서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8] 부시 행정부는 위협이 냉전시대보다 더 분산되었다고 보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MD 체제를 포함한 조치들에 대해 동맹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미국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으로 북한, 이란, 이라크와 같이 실패한 국가가 쉽게 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MD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MD 체제는 '국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Defense: NMD)와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 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장치이다. MD 체제는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하였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해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지상, 해상, 우주

8)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1972년 닉슨 전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ABM)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ABM 조약은 MD 체제 구축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미국 혹은 구소련이 핵·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숫자, 형태 및 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일방이 MD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그 미사일 방위망을 뚫기 위한 더 나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유인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약화된 것이다.

러시아는 ABM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미국의 MD 구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9] 러시아는 ABM 협정이 유지된다면 미국과 더불어 핵탄두를 1,500기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음을 보이는 한편, 미국의 ABM 협정 폐기를 위한 러시아제 S-300 무기구입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국가 대부분은 MD 체제 구축이 미사일 확산과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이해, 유보 등의 입장을 표현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현재 MD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인도 등이다. 군비경쟁의 우려와 함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라크 등이다.

MD에 대해 유럽은 공통된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 이유

9) 미국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ABM 개정이 자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대가성 보상이 크면 개정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는 MD의 역할로 인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잠재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서양조약기구(NATO) 역시 MD 체제 구축에 대해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NATO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사일에 대해 공동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구나 NATO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 틀이 극도로 애매 모호하다며 급진적인 미사일방어 계획 논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궁극적으로 세계안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MD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군사적 공격과 방어의 동시 효과를 최대한 누린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절대 우위로부터 좌절감을 느낄 것이며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에 MD 체제를 반대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MD 구축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북한, 이라크 등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핵경쟁국으로 간주하는 자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첫째, 중국은 현재 단탄두의 ICBM을 약 24기 보유하고 있는데, MD가 실시될 경우 중국의 ICBM 위력은 사라지게 된다. 연계적으로 둘째, '최소 억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최소한의 핵전력이 무력해 질 수 있다. 셋째, 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비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군비경쟁이 부담스럽다. 넷째, MD가 대만방어를 포함할 것이다.

미국은 MD 체제 구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략 2,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10] 그 부담을 줄이기 위

10) *Washington Post*, May 2, 2001.

해 미국은 참여국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즉, 참여국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게 하고 미국에 의존적으로 되게 하려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외교적 갈등과 기술적 한계 등을 문제 삼으면서 MD 체제의 일방적 배치가 군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11] 그들은 과연 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 방어망이 미 국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12]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MD를 구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MD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지하고[13]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3차례의 미사일 요격시험 중 2차례나 실패하였고 앞으로의 요격시험도 기술적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MD 체제 구상은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견제와 전망

미국은 일극·다극 체제 하에 새로운 안보전략과 함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고자 한다. 지금은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것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미·중 항공기 충돌사건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발표 이후 대중 포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한국 등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장기간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무역, 투자,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중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게끔 하고자 한다.

11) *New York Times*, May 3, 2001.
12) *Washington Post*, May 27, 2001.
13) *Washington Post*, May 27, 2001.

보다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은 일본을 끌어안으려 한다. 미국은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에 대한 비젼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젼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며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14] 한마디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중추적 역할을 맡기려 하며,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라인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정치를 내세워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일, 한·미 안보동맹이 역내 안정의 초석이 아니라 위협요소라고 여기면서 미국 및 역내 미 동맹국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대아시아 안보관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에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미 연합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미국의 힘과 부를 질시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 미국은 자국의 지도력에 순응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시장 진출 허용, 원조, 각종 제재 제외, 미국의 기준으로부터 면세 허용, 각종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여러 차원의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한 그들이 반미 연합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시장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당장 IMF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14) Remarks by Richard Armitage, quoted in *Munhwa Ilbo*, May 10, 2001.

가 반미 동맹을 체결한다고 할 때 누가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도 문제다. 과거 스탈린-모택동 시대에도 주도권 문제 때문에 반미 동맹이 깨지고 말았다. 중국은 러시아의 혼란 때문에 자신이 으레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신뢰하거나 존경하지도 않으며 자국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역동적인 중국에 굽히고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유럽에 속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냉전기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의 국내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상호간 안보위협이 줄어 든 상태에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START 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MD 체제를 실전 배치할 경우, 중국 및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러시아는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Topol-M 신형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려 할 것이고 중국 역시 다탄두 핵미사일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다탄두 핵미사일 보유는 STATR Ⅰ, Ⅱ를 자동적으로 무효화시킨다. 기술적으로도 MD 체제가 표적 상공에서 몇 기로 분리되는 다탄두 탄도탄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합동참모부의 일부 참모들은 미사일 방어와 우주작전 및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장관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더군다나 일부 참모들은 럼즈펠드 장관

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 국방 예산을 지출할 경우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무기들 즉, 전투기와 전투함, 탱크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15] 따라서 새 전략이 군부의 지지를 얻고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고충이 예상된다.

MD 체제 구축 및 우주방위계획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시 강화될 것이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MD 체제가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우주방위계획이 추진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공격용 위성무기 군비경쟁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진행중인 'START Ⅱ'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이 위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종국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위해 MD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부터 집요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어나가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교·국방문제에 있어 미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란이 자체 개발한 파테(Fateh)-110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발사(2001.5.31)는 MD 추진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비경쟁을 우려해 미국의 MD 체제 구상을 우려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적 측면에서 참여시 얻을 군사적·경제적 이득이 불참시 얻을 이득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은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나머지 유럽의 미 동맹국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유럽국가들의 정책결정을

15) *Washington Post*, May 27, 2001.

살핀 뒤 미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미 MD 체제 계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과 MD 체제 구상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겠지만, 동서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소련을 몰락시킨 군비경쟁을 21세기에 적용시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제1회의: 동북아 안보정세

● 사 회: 최의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 표: 「중국과 한반도」
신상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대중정책과 미·중관계」
席來旺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상」
이헌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郭曉兵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세 분의 발표의 의하면 향후 동북아정세는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정책 그리고 군사안보정책으로 당분간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담당자나 이 문제의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지역안정을 위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문제나 대만문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郭曉兵: 저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헌경 박사님이 발표하신 미국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이익 우선적인 대외관

계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저의 분석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관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이는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 장관이 부시 대통령에 제출한 건의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너무 중요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전략의 중점을 동맹국가와의 관계강화, 특히 일본과의 관계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관계팀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부를 보면 부시와 파월(Colin Powell)과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Condoleezza Rice)도 모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정책안보를 결정하는 데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인사도 포함됩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파월과 중요한 친구입니다.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동맹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제임스 켈리입니다. 켈리는 해군장교로서 국가안보문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을 보았을 때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월은 비교적 온건파에 속합니다. 하지만 파월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파월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화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24시간후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4월 10일 미국의 대변인이 경수로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워싱턴은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원조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기업이 이란에 무기 기술을 수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재검토 때문에 남북한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통일문제를 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통일은 미국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종철: 저는 중국측의 두 분 발표자에게 각각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앞에 계신 歐陽立平 선생님에게 크게 세 가지 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그리고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 행정부의 MD 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만 어떠한 형태이든지 규모의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MD 계획에 대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효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ICBM의 개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형태, 어떤 범위 내에서 러시아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미국이 MD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것을 전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유럽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을 축소 또는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은 미국의 MD 계획안에 대해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핵무기 감축을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전략무기 또는 신무기분야에서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한다든지 미국과 MD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국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아·태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이 대만에게 최신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또 대만의 TMD 참여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중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해상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몇 가지 조치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만문제에 관련해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 관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함으로써 대만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미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북한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그것이 한반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는 4자회담에서 중국이 비교적 중재적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席來旺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席來旺 선생의 발표를 들어보면 현재 중·미관계에는 갈등요인과 협력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주로 군사적인 안보문제분야에서의 긴장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양국간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공통적인 이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시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WTO에도 가입해야 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도 필요로 하는 등 협력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미국 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와 같은 군사안보전략 면에서의 긴장요인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요인들의 상호비중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중·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긴장요인이 협력문제보다 더 강화되어 긴장관계가 더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협력요인이 긴장요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긴장요인과 협력요인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균형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사회자: 우선 발표자들께서 지정토론자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경: 미국의 안보전략이나 미·중관계를 보는 시각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郭曉兵 연구원께서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보의 중심을 아시아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유럽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안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위협세력으로 여기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관점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유럽보다는 아시아를 불안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군사경쟁국으로서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GDP의 4~5%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군사비 증가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입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MD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유고전때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과연 유럽을 위해서 안보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은 지금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

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미국이 MD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은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국가들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이 MD 체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MD 체제 구축을 대처하기 위해서 과연 군비경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비경쟁을 할테면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인 소련이 몰락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에 이러한 전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MD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부터의 강한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내에서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군부로부터의 MD 구축과 관련하여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MD 구축을 군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간에 이와 관련한 많은 노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럼즈펠드 장관과 파월 장관이 그런 노선 차이로 인해서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동료이고 안건에 대해서 매일 통화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와의 차이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라이스 보좌관이 어떤 절충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안보전략이나 MD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내 그리고 동맹국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시련이 뒤따를 것이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고 선택인가는 전적으로 중국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歐陽立平: 많은 문제를 질문에 주셨는데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D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MD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을 대외관계 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군비경쟁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과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시아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국가가 신형무기를 통해서 다른 국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 국민들은 특히 중국 국민들은 유구한 역사와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MD 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MD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나 중국 심지어는 미국 국민들에까지 좋은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 동안 MD 체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각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기타 많은 국가들도 MD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압력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그들도 MD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MD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외군사력이 질적으로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군사력 균형은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MD에 대해서 우리만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MD는 기술적으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안에 실행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MD를 무너뜨릴 기술이 생겨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MD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목적은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문제는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합니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갈등이나 모순을 나타내려고 해도 제3국에 이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의 TMD 가입을 우려하는 것이지 TMD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TMD를 통해서 미국과 대만이 준군사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미국간에 대만을 두고 싸움을 벌여졌을 때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일본의 참여 형태 및 비중에 따라 대응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참여는 중국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호적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입니다.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과 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국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너무나 인접해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불리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중국의 입장과 염원을 미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중

국은 고압적인 태도 및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병이 숨어 있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4자회담에 참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중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모두 중국의 친구입니다. 북한이 어려울 때 중국은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ICBM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MD에 대해서 중국이 핵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화의 단계와 국방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정상적으로 국방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MD 체제 구축에 대해서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MD가 확실한 틀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席來旺: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미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미관계는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미관계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의 긴장과 협력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정찰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미간에는 긴장상태였습니다. 그리

고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였을 때가 바로 긴장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도 긴장이 존재합니다. 몇 년 전에 중·미간에는 무역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긴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협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 국면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미관계에는 많은 특징이 존재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긴장과 협력은 항상 계속 공존할 것입니다. 안보영역에서 협력이 있을 수 있고 경제분야에서 긴장상태가 돌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소련을 해체시켰던 군비경쟁을 통해 중국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변하였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미관계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미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후에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현재 동아시아 안보정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일관계 및 중·러관계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도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과 인도는 적대적인 갈등관계를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인도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MD 체

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신상진 박사님의 말씀을 질문보다는 논평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고, 앞으로 MD 문제의 포함하여 정책실현과정에서 중국이나 중요한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2회의: 중·미의 한반도정책

중국과 한반도: 한국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한반도정책

신상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언

한반도는 미, 중, 일, 러 등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는 2000년 6월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대 사건'들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들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대립과 외교적 각축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4강의 인식과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국과 관계강화를 시도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전개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향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중국학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육지로 접경하고 있으며,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중국 동북삼성지역에 약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조성된다면 북한주민들이 대거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수 있는 등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바,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육지로 2만킬로미터와 해양으로 1만 8천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국경선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서부지역 대개발 등 전 국토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안정과 평화상태가 유지되어야만 중국이 경제발전에 전력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핵심 대외정책의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지도자들과 접촉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쟝쩌민 주석과 리펑 총리 등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일 위원장 방중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북한에게 남한과의 대화를 설득하였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주변 4국 중 가장 강력한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금년 3월 탕쟈쉬엔 중국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확신한 바 있다.[1] 이처럼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명분 약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북한 사회주의 체제붕괴 불원

중국과 북한관계는 여전히 '순치관계'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게 되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의 변경지역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커다란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남아 있다.

---

1) 탕쟈쉬엔 중국 외교부장은 9기 전인대 4차회의 개최기간중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www.peopledaily.com.cn/GB/shizheng/19/20010307/410283.html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후 1년여만에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자신의 체제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래 중국은 북한을 중국 자신의 체제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소련붕괴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정치·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원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스스로 체제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정부와 기업들에게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지원 제공을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 자신도 식량과 원유를 일부 수입하는 실정이다.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이 베이징 중관춘과 상하이 등 경제개발지역을 시찰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권유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 그러나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핵심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중국식 개방'을 채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증대될 것이다. 1999년 5월 미국의 전폭기들이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하여 중·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된 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2) 장샤오밍,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중국의 역할," 동아일보사 주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2001. 4. 13) 발표문, p. 6.

3) 蕭然山, "金正日:新世紀初秘訪中國," 「世界知識」, 2001年 第5期 (2001. 3), pp. 14~15.

서 양국이 최고 지도자 교환방문 전통을 복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후 중·미관계가 경쟁자관계로 변화되면서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성사되고,[4] 연내 쟝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국견제 정책을 적극화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전개할수록 중국과 북한은 안보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은 2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이며, 개혁·개방정책 성공으로 경제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세계 7대국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역규모도 4,7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7대 교역국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2000년 중국은 24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1,65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5]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001년 4월 1일 중·미 군용기 충돌사건 이후 부시와 파월 등 미국의 지도자들이 24명의 승무원들을 송환받기 위해 중국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 표현을 서면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

4)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 취임식 당일 베이징에서 쟝쩌민 주석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5) "200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全文," www.peopledaily.com.cn/GB/jinji/31/179/20010228/405298.html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주변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내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 덩샤오핑은 1980년 당중앙 간부회의시 행한 연설에서 4개 현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면 대만의 통일과 반패권주의 투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최종 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가통일을 실현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데 징검다리로 이용되는 등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충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1895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갑오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대만과 랴오동반도 지역을 일본에 할양하고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겪었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1931년 만주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통치하는 한편, 1937년부터는 전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 38도선을 경유하여 중국대륙으로까지 진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한국전에 방대한 규모의 인민지원군을 파병하였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미국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침략전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병을 정당화하였다.

이처럼 한반도는 19세기말 이후 해양세력의 중국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1840년이래 중국은 해양세력으로부터 7차에 걸쳐 군사공격을 당하였는데, 이 중 두 차례는 한반도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두 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한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을 견제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정책은 중·미관계가 악화될수록 명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견제 또는 봉쇄정책을 노골화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력 증강정책을 표면화하면 할수록 중국은 미·일의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끌어안기와 한국 접근정책을 적극화할 것이다.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조기 수교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1991년 이래의 북·일 수교교섭 진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고, 1994년 하반기이래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과 정치교류를 활성화 한 이유는 북·미 관계개선 합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1999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이후 중·미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은 북한과 지도부 교환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과는 국방장관 교환방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적극화하였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중국은 북한과 전통우호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정치·안보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5.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지지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미·일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남북한 당사자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부터 한반도문제가 한민족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반도문제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약화·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주변 4국 중 유일하게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를 맺고 있으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다른 주변국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미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클린턴 행정부 시기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안정유지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대중 견제정책을 강화하자,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시키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세력으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일미군과 함께 대만해협 사태에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6)]

6.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주변 어떤 나라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면서도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에 대해 전략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MD 체제 구축 움직임과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인하여 중·북한간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강화를 시도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2000년 10월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한국과도 정치·군사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즉, 중국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개혁·개방정책 성공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경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년 내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 중국이 계속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국가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

6)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잘 나타난 글로서는 于美華,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瞭望」, 2000年 第39期 (2000. 9), p. 62; 畢玉蓉, "駐韓美軍爲何賴着不走," 「解放軍報」, 2000. 7. 10; 左翼青年, "美帝國主義從朝鮮半島滾去!"www.chinabulletin.com/luntan/guoji/zuoyi.txt 등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대북정책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지난 1월 20일 부시(George Bush)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른 외교·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집권이래 계속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새로운 군사·안보전략 등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과 마찰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관계가 급속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며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여 작성되는 군사·안보전략은 외교활동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 부시 행정부는 이를 역행하여 군사·안보전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

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정책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2.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미국의 대외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상주의적 경향과 현실주의적 경향의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의 흐름을 이어 받아 다자간 안보협력, 군비통제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외교를 강조하는 공화당은 다자간 협상이나 군비통제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며 오히려 국방력 강화 및 국제정치의 권력게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행정부는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전략방위구상(SDI)을 축소하여 한정된 핵공격을 대상으로 한 핵 전략 즉, '제한공격에 대한 지구적 방위'(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GPALS)를 구상하였다.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비용을 더욱 축소하기 위해 GPALS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본토미사일방어체제(NMD)로 분리하여 TMD 위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축소 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반대하며 NMD의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1996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화당은 NMD 구축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웠으나,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밥 돌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NMD 조기 구축에 대한 옹호는 오히려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이라크·파키스탄·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럼즈펠드 보고서」(Rumsfeld Report)를 제출하였다. 럼즈펠드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실험·발사하였다. 이에 공화당은 NMD 구축의 명분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찾았다.

1998년 미국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자 클린턴 행정부도 NMD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문제는 기술적 가능성, 국제적 군비통제에 미치는 효과, 타국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의 완결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구상하였던 수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개입정책을 실시하며 미국과 중국관계는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증진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주요 목표는 북한이라기보다 중국이다. 현재 미국의 국방정책은 중국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여 수립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상대로 봉쇄전략을 추진하며 미사일방어체제 등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소련의 민주화를 촉진

시켰다는 논리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 같은 비민주적인 폐쇄 사회가 아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스탈린식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이용하여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대중국 전략의 종속변수로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남북한간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3.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개입정책의 기조하에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페리 보고서에 따라 대북 관계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 2000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Madeleine A. Albright)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으로 인해 급속한 관계개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 문제 등에 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인 유화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확실히 보장하는 검증장치가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향후 대북정책을 투명성, 검증 가능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은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미국측의 강경정책에 항의하는 의도로 남북회담을 전면 중단시켜 버렸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채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 거부, 테러지원국 지정, 불량국가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상 등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대북 개입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조만간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은 5월 9일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그는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 최대한 반영, 제네바 합의의 계속 유지를 표명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6월초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월 26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6월중 재개하되 핵·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대북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단계별-이슈별로 한국 정부와 협의하며 대북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북한과 대화는 재개하되 대량살상무기인 핵·미사일의 비확산을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협상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4. 미·북관계 전망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기간 4년 동안 현재와 같은 강경노선을 고수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국제관계는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가 맞서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조만간 정권교체기의 과도적 성격을 벗어나게 되면 대외관계에서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성향은 파월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와 럼즈펠드를 중심으로 한 국방부가 온건정책 대 강경정책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현재까지 럼즈펠드의 보수·강경정책을 보다 경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국내외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국무부 중심의 실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총 득표수에서 패배하였지만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하여 겨우 당선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대내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을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9석 우위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포드(James Jeffords) 공화당 상원의원의 탈당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국내외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에 대한 유럽·아시아 국가들의 반발과 더불어 대외 강경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견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에 온건한 성향을 보이게 되어도 미·북간 관계개선 협상은 급속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에 대해 식량원조의 조건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핵·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협상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국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큰 미국과 북한의 협상과정에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계개선을 향한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불화로 인해 개최되어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2회의: 중·미의 한반도정책

● 사 회: 陶 堅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 발 표: 「중국과 한반도」
신상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한반도정책」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오승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토론자의 논평 전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박사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익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를 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사회주위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상진 박사님께서도 중국문제 전문가이신데 현재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과 한국은 어떻게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바꿀 것인가

에 대해서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戚保良: 두 분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박사님의 발표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그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남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수교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나 대량살상무기 경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유리한가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부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불명확한 입장 때문에 미·북관계가 후퇴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 시기 한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입장과 북한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남북한의 관계진전 그리고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남북한이 자주적인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용정책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북관계에서 중요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외교중점을 아시아로 돌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겨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북한과 대만을 들 수 있습니다. 김국신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시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1~2년 이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아·태전략이 확정되면 동북아에 대한 입장도 명확해 질 것입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강경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신정부로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모색을 통해서 상대방은 얼마나 양보를 할 것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도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한반도정책에서 한국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 안보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3국 모두 한반도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6월에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

국에 대해서 계속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고려, 동맹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승렬: 우선 두 분 논문의 기본적인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부터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지만 논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의 변경지역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붕괴를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일한국 이후에 곧바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하기보다는 북한지역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혼란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에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 이후 1년만의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김국신 박사님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안보문제, 군사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좀더 미국 대북 정책의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학술회의 주제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후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 유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것들이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미사일문제에 대한 검증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다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단기간 내의 전술적인 면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 한반도문제를 되짚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1991년 한국과 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곧바로 핵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남북관계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해서 남북관계는 다시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다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신상진 박사님의 논문이나 김국신 박사님의 논문이나 다 같이 중·미관계를 남북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미관계의 양자의 관계와 주변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악화될 수 없는 한계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관계에서 본다면 중국은 미국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는 중국시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관계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세계 차원에서는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미관계가 협조관계로 흐른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낙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가지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좀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각국은 주어진 입장을 가지고 제로섬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을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제 토론의 결론은 앞으로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을 다룰 때 우리는 주변국의 변수를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대한 주변국의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席來旺 선생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席來旺: 저는 戚保良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신상진 박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국신 박사님께서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아주 치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각도를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책에서 남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충하고 싶은 것은 미국 부시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그리고 집권할 당시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단일주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이익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 데 대해 동맹국가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놀란 것은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와 오승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문제와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제도 선택에 대해서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해체 때문에 중국이 발전의 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한의 자주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신상진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국신 박사님과 신상진 박사님께서는 중·미관계를 한반도정책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의 논문에서 중·미관계가 긴장되면 될수록, 특히 1999년 중국이 유고 대사관이 습격 당하였을 때 북한의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미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예로 결론을 내자면 중·미관계가 긴장되면 될수록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반도정책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역으로 중·미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미관계가 한반도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席來旺 선생님께서는 중·미관계의 긴장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4자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미관계가 긴장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게도 결코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미관계가 긴장되면 될수록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강화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미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4자회담 재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자회담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미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유지되게 되면 한반도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승렬 박사님께서 저와 몇 가지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변경지역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한국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경과되어야 가능할 것이지만, 중국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혼란이 중국에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다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접경 지역에 통일한국이 등장하였을 때 중국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삼성지역에서는 많은 부유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삼성지역에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 통일된 이후에 소련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북한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중국에게는 소련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이나 동유럽 경우에는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의 붕괴

가 소련체제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동유럽과 소련은 안보적으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거의 와해가 되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은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아주 큰 혼란에 처하거나 설령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戚保良 선생님과 사회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을 희망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국신: 戚保良 선생님께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부시 행정부도 대북 개입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을 하면서도 결과가 없이 시간만 끄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포괄적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패키지 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 중 재래식 무기협상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군사적 상호 신뢰 구축을 이룬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6월에 있을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이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선 압박을 가해 놓고 그 다음에 남한과의 문제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승렬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을 다루면서 제목에 군사안보전략을 앞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형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고어도 클린턴보다 검증문제를 강조할 것이라는 태도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제기하는 검증문제는 똑같은 검증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보전략의 시각 차이에서 같은 차원의 논쟁으로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전에 席來旺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호이익, 또는 군사전략의 긴장과 협력 하에서도 양국관계는 점차 나아질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 표명하는 바와 같은 정책을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개월간 보여준 행태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의 미·북관계와 미·중관계를 전망한다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개월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행태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세계사적인 권력투쟁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30년 후에 도전해 올 수 있는 중국을 지금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을 가진 부시 행정부 내의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북한은 사실상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미관계를 한반도의 중요 변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내부의 정책

노선을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부시 행정부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席來旺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가와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였지만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의 가장 큰 문제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마저도 어떤 면에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미국 자신의 일방적인 사고를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 행태는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익개념 및 국가전략에 큰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 회의를 들 게 만듭니다. 중국이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였다고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남북관계가 잘 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포섭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시켜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없이 중국 자체를 가상 적으로 해서 북한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제가 사회자이지만 오승렬 박사님께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승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관계에서는 연구대상이 국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국가와 교류하고 있는 국가가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접촉하였던 북한의 간부들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욱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

기 이전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개혁·개방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등소평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승렬 박사님께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영향을 갖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승렬: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990년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선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의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에만 의존해서 경제개혁을 해 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비교해 볼 때 1970년대 말의 중국과 비교하여 북한은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중국에서는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지향적인 지도자들이 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문화대혁명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소평과 모택동 관계를 보면 등소평은 현실의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일성은 바로 김정일의 아버지이고 김정일의 권력기반이기 때문에 김일성 노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자께서 북한의 중간계층이 지도자보다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김정

일 주위의 기득권층은 그다지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간계층은 큰 변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실물경제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이 그렇게 쉽게 빨리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경계관계가 상당히 느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기구의 도입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 때문에 시장기구의 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인으로는 대만과 홍콩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홍콩과 대만을 통해서 중국경제가 국제경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남한에 대해서는 분단국가로서의 경각심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요인과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북한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당분간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합리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2부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의: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

중국의 안보정세 인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이 1950년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실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는 클린턴 전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즉 북한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미·북 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간에 대북 포용정책 접근 방법상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설정도 클린턴 전임 대통령시 중·미간 합의하였던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됨을 시사함으로써 중·미 관계의 악화는 대만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계획과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국관계 강화 모색 등이 미·중 관계를 더욱 경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향후 동아시아 정세가 남북한 정상회담 전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미, 북·미, 한·미간 갈등 예상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어떻

게 변화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2. 중국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는 내정(內政)의 성공으로 자국의 주권이 신장되어왔음을 치부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이고 도약적인 약 8% 이상의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국방현대화와 정치적 안정이 도모되었으며 홍콩 및 마카오의 자국으로의 귀속 등으로 자국의 주권이 국제사회에 크게 신장되고 왔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지도부 역시 중국의 위상이 크게 신장될 수 있는 데는 동아시아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데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변의 안정 유지를 위해 중국이 외교적 능력을 집중하여 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코소보 사태에 직접적으로 무력개입을 한 후부터는 중국은 미국의 행태는 신국제주의(新國際主義)[1]로 중국의 안보이해를 점차 훼손할 것을 크게 우려하기 시작하였다.[2] 코소보

1) 沈國放 유엔주재 중국부대표는 제54차 유엔총회 제1차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TMD계획과 ABM 조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언급하고 냉전적 사고는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권주의 강권주의인 신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세계는 더욱 불안정하다고 언급하였다.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2) 중국은 「政治報告」를 통해 등소평이 제창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특히 경제개혁의 비약적 발전, 정치개혁의 추진, 정신문명 건설의 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人民日報」, 1997. 9. 18 ~ 9. 20.

사태가 유럽지역에서 발발한 사건임에도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점차 불안정할 것으로 단정짓고 있는 데는 코소보 사태에서 보여 준 미국의 냉전적 사고의 상존과 패권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군사집단 확대 및 동맹 강화 움직임 등이 현저히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차원의 군비통제와 군축노력이 점차로 감소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시도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3)]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이 증진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역내 군사동맹 강화,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과 군사기술혁명 증진에 따른 군사전략의 불균형, 미·북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4)]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에 대한 전략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가. 역내 군사동맹 강화

중국이 동아시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미·중 안보 관계가 갈등국면으로 치닫을 것으로 분석한 데 있다.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신속한 공중 폭격을 가함으로써 군사력 위주의 미국의 개입정책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미국의 개입정책은 동아시아에서 미·일 '신 안보 가이드라인' 제정과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등으로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동맹강화 전략으로 더욱 가시

3) Xinhua, "International Community Urges Greater Disarmament Efforts," *FBIS-CHI-1999-1023.*

4) Chao Chien, "Beware of the Arms Race Trap When Building a Hi-tech Army," Ching Pao, *FBIS-1999-0907.*

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에서 '주변환경'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 역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소나토화'를 구축하려는 기도이며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역내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난하였으며[5] 대만해협상에서 위기사태가 발발할 경우 일본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6]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가 대만의 대중국 방어능력의 약화를 빌미로 대만에 대해 군사무기 판매 확대를 시도함으로써 사실상으로 미·대만간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클린턴[7] 및 부시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강력히 비난하였는 바, 이는 무기획득으로 인해 대만 내에서 대만독립 주장을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양안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과 같이 부시 미 행정부는 대만에 장거리 레이더, 구축함을 판매하였으나 4대의 Aegis 구축함 판매는 중국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노력은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일간 협의를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한국 혹은 일본이 미국과의 협의가 없는 대북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간의 공조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군사동맹의 강화노력이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2000년 4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NATO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5) 중국은 미국의 TMD 계획을 'Asian version of NATO' 라고 비난하고 있다. *FBIS-CHI-2000-0229.*
6) 「中國時報」(1998. 5. 26).
7) *FBIS-CHI-2000-0413.*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타국의 침략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표방함으로써 유럽지역의 불안정이 자칫하면 동북아 안정까지도 훼손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군사기술력 발전과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기술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한 군사기술력 발전과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으로 향후 동아시아는 군비경쟁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군사기술혁명을 통해 이제는 외계에까지 국가간 군비경쟁이 초래케 되었는 바, 이는 미국이 외계를 우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국 및 동맹국가들의 지상군 작전수행에 군사적 우위를 더욱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8]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체제가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판단으로는 러시아가 '국가안보 가이드라인'(National Security Guidelines, 2000. 2)에서 이미 기존의 전략 미사일의 수를 감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20~100기 정도의 미국의 요격미사일에 의한 제한적인 억지력이 당장은 미·러간 전략균형을 훼손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9] 다시 말하면, 중국은 미국이

8) 미국은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2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통해 약 5기 정도의 전략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계획하고 있다. Wade L. Huntly and Robert Brown, "Missile Defense & China,"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3 (2001. 1).

9) 윤덕민, "미국의 NMD 구상과 한반도"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2001. 4. 20), p. 4.

MD 구축을 위해 러시아에게 ABM 조약 개정 불사를 선언한 점과 비록 러시아가 미국의 MD 구축이 미·러간 공격형 핵무기의 균형을 불안정케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지만[10] 미국의 입장을 변화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MD 계획은 이미 동아시아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 구축과 연계되어 발전되고 있음을 중시한 데 있다. 중국은 일본의 참여로 인한 정보수집 위성과 선제공격 능력 배양과[11] 향후 한국 및 대만의 TMD 계획 참여가 종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2] 중국 지도부의 비난은 2000년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특히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구실로 대북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NMD와 TMD 개발을 명분화하고 있지만 실상은,[13]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의 ND 계획 및 TMD 계획 가동은 미 군사력 우위를 확보케 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미사일 균형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국 등이

10) Jonathan Schell, "The Folly of Arms Control," *Foreign Affairs,* Volume 79, No. 5 (September/October 2000), p. 26.

11) 1999 여름에 NMD 계획안이 미국회를 통과하고 미 행정부가 이를 비준하였으며 1999년 10월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발사 실험이 있었다. 2007년경 미 본토 전역에 실전 배치토록 되어 있다.

12) 「人民日報」 (1998. 7. 28).

13) 중국은 코소보 사태이후 중국은 기존에 추진하였던 국제정치의 두 개념인 '평화와 발전'이라는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고 대미 견제를 위한 국제적 연합전선 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eaceful Order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joint international semin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00. 5. 27, p. 9.

참여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대만해협상에 200기 이상 배치하고 있는 중국의 대대만 미사일 공격능력이 전략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14]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략미사일 구축에 많은 재정투입과 핵실험을 재개하고 있다.[15]

다. 미·북 관계 개선 어려움

중국은 미국이 1999년 9월 50년간 지속되어 온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 것은 한반도 안정과 동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대유럽 및 대한국 접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미국의 대북 압력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조명록 북한특사의 방미(2000. 10)로 미국과 북한은 양국간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음을 연합성명에 표명한 데 대해 중국은 미·북간에 역사적인 진전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지지하였다. 미·북 성명에서 북한은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입장과 양국이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미국은 또한 대북 식량 및 의약품을 위시한 경제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미군병사 유해 색출에 공조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한 전문가들

14) Wang Jisi, "China's New Ident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p. 8.
15)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to,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00, pp. 53~63. 중국은 1999년 10월 전략핵무기의 2차 공격 능력을 제고키 위해 약 97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의 교환과 경제협력과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과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16]

다시 말하면, 중국은 1987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냉전이후에도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로 인해 양국간 모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나 클린턴 미행정부 2기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여 왔다. 이는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더욱 가시화 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북간 관계 개선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입장에서 중국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2000. 10. 25)을 지지하였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 표명으로 인해 향후 미·북관계가 원만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양국간 외교관계 실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단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요약하면, 상기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 지도부는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또한 미국주도의 강력한 미·일, 미·한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간의 대북 정책 협의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중국 자신을 봉쇄하는 데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이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 입장과 정책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 혹은 정책의 양상이 사안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16) 「人民日報」 (2000. 10. 14).
17) 「人民日報」 (2000. 10.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정전협정 폐지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과 같은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중국의 입장

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다.[18]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따라 편향되게 적용해 오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무장을 수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전략적 협의국인 북한이 과거핵 문제에 대한 유엔차원의 검증요구를 회피할 경우, 미국이 보다 강압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이 남한으로 재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과거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핵무기 개발 및 사용억제를 위한 IAEA의 강제사찰이나 무력적 방법보다는 미국·유엔·북한간의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1999년 말 북한은 미사일을 약

18) 「大公報」, *FBIS-CHI-1999-0930.*

50~100기 정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2~24기는 수출하였으며 15기는 시험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5~75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9]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러시아의 지원 혹은 중국의 도움 하에 실현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러시아 과학자의 지원과 중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짐 만 기자는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제이며 러시아 부품으로 비밀리에 만들어 졌으며, 북한에 있는 러시아 과학자의 도움으로 현재도 개발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는 여러 종류의 러시아 회사들과 북한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20] 한편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심증은 가나 이에 대한 확증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20기 정도의 전략핵 미사일을 보유한[21] 중국은 처음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반대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한·미·일 대북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가 강하게 나타나자 묵시적인 반대 입장으로 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은 방한시 중국정부는 핵 및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

19) Joseph S. Bermudez Jr., "The rise and rise of North Korea's ICBMs," *Jane's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997. 7), pp. 57~59.
20) *L. A. Times,* 2000. 9. 6.
21) 중국은 현재 20기의 DF-5A ICBM(약 8,000Km)의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Michael McDevitt, "Beijing's Bid,"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2000), pp. 179~180.

인임을 강조하였다.[22] 왕광야 중국 외교부 차관보도 2000년 2월 6일 뮌헨에서 개최된 NATO 안보국방 포럼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할 경우 북한도 미사일과 핵 의혹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건설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대북 무력제재 대신에 정치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주문하였다.[23]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최근 북한이 미·북 미사일 회담기간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점과[24]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여 중국이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된다.[25]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TMD와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미사일 개발 기술이 제고되어 동아시아에서 향유해오고 있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우위가 훼손되는 점을 크게 우려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일·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마저 포기토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MTCR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만을 북한에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 "Spokesman on Chi Haotian's Russia, UK, ROK Visits," *FBIS-CHI-2000-0118;* 연합뉴스 (2000. 1. 20); "ROK, PRC DefMins Agree To Regular Annual Meetings," *FBIS-EAS-2000-0120.*

23) 「大公報」, *FBIS-CHI-1999-0930.*

24) 북한은 1997년 9월 미·북 베를린 미사일 협상시 협상 기간 중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표방한 바 있다. William S. Cohen, "Rouge States Cannot Hope to Blackmail America or Her Allies," *Times (London)*, March 1, 2000.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입장 분석은 Scott Snyder, "Pyongyang's Pressure," *The Washington Quarterly,* pp. 163~170 참조.

25) 코소보 사태과정에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미국을 지적하고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미국의 전략이 대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사용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예측 못할 도발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26], 남북한 정상회담이후 양국간 정치적 긴장감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신뢰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8월 22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향후 대남 대미 관계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반해 중국 「人民日報」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여 한국의 한반도 평화노력을 지지하였다.[27]

클린턴 미 행정부시 크게 거론되지 않았던 북한의 재래식 공격무기 감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남북한간 재래식무기 감축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이 선행되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북한 군사력 감축보다는 남북한군의 후방으로의 배치가 더욱 쉬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남북한 군사력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미국과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정전협정 유지 문제

중국은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안정치 못한 것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26) 陸佰源, "動蕩孕育調整 複雜因素增多: 1998年國際形勢回顧," 「1999國際形勢」 (上海: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上海教育出版社, 1999. 11), p. 20.
27) 「人民日報」 (2000. 8. 23).

양국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데 연유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상과 합의에 의한 남북한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전협정이 폐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제1차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간 군사적 대치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간에 국지적인 돌발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효성만은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그 동안 4자회담 협의과정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였다.[28] 정전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체결 당사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비록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자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임을 크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해 사실상의 전쟁상태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과 함께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협정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다만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미·중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과 미국이 4자회담 자체를 급선무로 여기지 않고 있어 4자회담에 중국과 미국이 정전협정 폐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28) Su Hao,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Press Foundation, and Korean Information Service, 2000. 11. 2, pp. 76~77.

29) 1998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4자회담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여 4자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었으며 6자회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이 단기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평화협정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수용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정전협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면 중국도 북한의 입장을 동조할 것이다.

라. 주한미군 존재 문제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남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일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장래는 기본적으로 한·미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1990년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0]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미군주둔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에 국한한다면 북한이 미군주둔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31] 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남북한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군 역할을 수용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주장인 평화유지군 역할변화를 미국이 단기간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30) 남북한 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기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용인하였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사전에 중국과 충분한 입장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국당국이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James A. Kelly, "North-South Relations after the Summit," CSIS-KINU Seoul Workshop, 2000. 11. 16, p. 9.

31) *Beijing Review,* 2000. 7. 26.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혹은 한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제고되면 될수록 주한 미육군의 감축을 예상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단독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보다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현성이 보다 큰 방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평화협정 체결후 중국은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실현이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역설한 데 대해 중국의 「解放軍報」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이 점점 부적절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함으로써[32]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 학자는 한반도 통일이후에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33]

중국의 주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일미군의 감축을 기대하고 있으나, 주일미군의 감축에 따른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입장도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 갈등 속에서 중국은 한반도 군사외교를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중·북 군사협력과 중국 군함의 남한 항구 방문이든지 보다 정기적인 고위급 군인사의

32) 「解放軍報」 (2000. 7. 10).

33) Shiping Tang, "A Neutral Reunified Korea: A Chinese View,"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Fall/Winter, 1999, p. 466.

상호 방문 등이 더욱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4. 결어 및 전망

중국은 향후 동북아 정세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자세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구조가 지속될 것이며 미·일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만문제로 인한 미국과는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간의 점진적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자국의 정치, 안보, 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많은 손실을 경험한 점을 인식하여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개입하여야 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평화체제 구축안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무엇보다 점진적이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정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로 인해 중국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평화구축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토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반대를 위한 미국의 무력적 위협을 반대하고 미·북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에 대해 우선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에 따른 북한 재래식 군사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며 그 수준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중·북한간 안보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안보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반중국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역할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역할 변화는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김정일의 한국방문을 지지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4자회담 틀 내에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남북한이 협의하고 합의한 협정에 대해 미국과 같이 수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의 참여를 크게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후방배치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미국이 한반도에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

우, 중국은 북한의 주장인 유엔사령부의 완전한 해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남북간 국지적인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국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1. 중·한관계 평가

가. 중·한협력의 눈부신 성과

수교 9년 동안 양국은 총 11번의 정상회담(한국 대통령 세 차례 방중, 중국 국가주석 한 차례 방한, 국제회의 참석 중 양국 정상의 일곱 차례 회담), 12번의 준정상회담, 33번의 외무회담을 가졌으며, 국회와 정당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70명의 한국 현 국회의원이 잇따라 방중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방문국이 되었다.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교류도 중·한교류의 새로운 분야가 되었다. UN, APEC, ASEM 등 국제기구와 국제문제에서 양국간의 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작년 양국의 무역액은 31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문화, 스포츠, 산업, 금융, 어업, 환경, 해양, 농업, 건설, 교통운수, 과학기술, 정보통신과 노무 등 분야에서 양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작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 수는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50만명을 넘었다.

나. 포괄적 협력관계 지향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쌍방은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으며, 2000년 주룽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협력 동반자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얼마 전 리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국 지도자와 양국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한 층 더 심화하자고 밝혔다. 올 가을, 김대중 대통령이 상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에 장쩌민 주석과 다시 만나 중·한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중·한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입장

가. 한국의 대중 정책

(1) 중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보장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장기목표는 주변 안보 환경에 입각하여 중·미·일·러 등 4대국과 정치, 경제, 군사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과도 장기적 선린우호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즉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고, 햇볕정책을 지지하여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촉진하며, 한반도 평화협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대국과의 균형적인 외교 틀 내에서 대중관계를 발전시킨다. 냉전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대국과의 균형적인 외교 틀을 구축하고 지역 집단안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대중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기타 대국과 관계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중국을 대국과의 다자간 세력균형 구조에 포함시킨다.

(3) 중국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해외시장 중 하나이다. 경제구조조정이 주춤하고 미·일 경제가 침체되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큰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때문에 한국은 한·중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즉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과 서부대개발 계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중·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다.

나. 중국의 중·한관계 발전에 관한 입장

(1) 주변 환경의 안정을 통해 국내 발전을 보장한다. 금세기 중엽까지 중등발전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의 발전목표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변안보환경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한 당사자이므로 중·한간의 장기적 선린우호협력은 중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2) 중·한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 동북아지역과 한반도는 역대로 강대국의 군사, 외교 전략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 북한과 역사적인 화해를 실현하였다. 중·한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한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제4의, 중국은 한국의 제3의 무역국이며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이다. 중·한경제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 따라 상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계획은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3. 중·한협력에 관한 몇 가지 견해

가. 유리한 여건

(1) 중·한협력은 이미 건실한 기반을 다졌다.

중한이 수교를 한 지는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실현하였다. 내년은 중·한이 수교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은 이를 계기로 협력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세의 완화는 중·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으며 아울러 북한은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중·한협력에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나. 협력 방향

(1) 교류 심화를 통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속 강화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다차원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수교 10주년을 계기로 관과 민의 각종 활동을 추진하여 우의를 증진한다. 양국 관련 부처간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선한다.

(2) 한반도 평화 협상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즉각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협상한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대화와 화해를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자주통일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협상이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화해 분위기 유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남북한 간의 교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마련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4자 회담을 재개하여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미가 이를 보장하자는 건의를 하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중국, 한국, 북한 등 3국의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3국간의 협력 여건이 앞으로 더욱 무르익을 것이다.

(3) 공동 관심지역과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일본의 우경화 문제>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심의 통과시켰으며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장하고 있는 등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한은 이에 공동 대처해 잘못된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MD 연구개발과 구축 문제>

미국의 MD 연구개발과 구축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에 대해 중·한은 공통 모색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일·한 3국의 협력>

중·일·한 3국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삼국협력은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 대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협력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제3회의: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

● 사 회: 박영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 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중협력」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戚保良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 토 론: 姜曉燕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박영규): 제3회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한·중협력입니다. 그러나 제3회의는 우선 제1회의와 2회의를 종합하는 종합회의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문제는 당사자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변국가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이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1회의에서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고 제2회의에서는 중·미의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의와 제2회의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제3회의에서 한반도평화와 한·중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번 회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정향적인 회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중협력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정책제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 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曉燕: 저는 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동북아의 안보와 형세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동북아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 박사님께서 중·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제안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또 남북한이 조속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면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림픽 때 남북한이 공동입장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중국인들을 감동시켰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대치되어 있던 남북한이 결국에는 민족화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보면서 남북한이 하루빨리 냉전을 마치고 국가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남북한의 통일 달성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상대로 보고 있으며 북한을 대중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염원은 하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그다지 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정확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능동적으로 미국의 대외관계 대외전략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로 보면 경제적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동북아의 협력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3국이라는 새로운 협력 틀이 마련되었고 그 발전속도도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경제적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북·미 지역에도, 유럽에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고 아시아에서도 APEC이라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지역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협력을 해야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문제에서 각국이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은 양자회담이나 혹은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의 길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은 이미 작년에 아세안+3국 회의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IP 기술 발전과 대외적으로는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중국은 매우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이미 거대한 자금을 들여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중국 투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곤: 저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문제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춘흠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최 박사님은 중국의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분석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러시아 또는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아정세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보완이 되면 좀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를 보면 러시아가 영내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996년에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폐기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 동맹국이 없습니다. 2000년 4월에 채택된 러시아 군사독트린에 나타난 동맹국은 CIS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자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자회담은 1999년 8월에 6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4자회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戚保良 선생님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변화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발표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曉燕: 저는 오히려 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께서는 중국이 남북한 정전협정의 조속한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며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조정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조정 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춘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여인곤 박사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여 박사님은 중국의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관계 현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MD 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결성을 나타낼 때에는 하나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상반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MD의 대해서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입장

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MD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MD 문제에 대해서 결성을 나타낼 때에는 더욱 더 긴장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하신 4페이지의 동맹국이 CIS 국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유럽지역의 동맹을 언급한 것입니다. 유럽지역에 불안정이 나타날 경우 그것이 신속히 아시아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8월 6차 회담 이후 4자회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의 결정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협상에 더 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미·북간의 미사일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4자회담의 전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저보다는 중국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姜曉燕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4자회담 경우를 보았을 때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이 4자회담 참여에 소극적이었을 때 중국도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좀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남북한 상호간의 군사적인 위협이 축소될 필

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MTCR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북한의 MTCR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옮기고자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설득한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보다 더 가까워 질 때 姜曉燕 선생님이 생각한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이고 적대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만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적인 차원보다는 전향적인 차원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외교도 필요하나 전향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자: 戚保良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인데 여인곤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4자회담 전망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중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戚保良: 먼저 여인곤 박사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측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작년 정상회담

이후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관계를 보았을 때 재작년부터 북한은 대외관계를 확장시키면서, 과거에는 서방국가들과 거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과 수교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EU 국가들과 수교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개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첫번째 방문하였을 때 북경의 중관춘(中關村)을 방문하였고 롄샹(聯想)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두번째 방문하였을 때는 상하이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푸동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과거의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방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성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으며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개발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걸고 있는 구호에서도 드러납니다. 북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지금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혁·개방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승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박사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 그리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

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의 필요 때문에 이러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자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시 4자회담을 선택한 것은 매우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4자회담을 선택한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4자회담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화해와 대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에는 평화협정 체결보다는 신뢰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방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미가 이루어지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남북한간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자회담이 실현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반도 형세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한층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4자회담은 앞으로도 한 동안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장애요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에 있어 장애요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중과의 협력에는 그다지 장애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중간에는 근본적인 이익 충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매우 국부적인 것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간에 이루어지는 무역마찰이라든가 그리고 상호간에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간의 수교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사회제도나 이데올로기 면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달라이라마 방문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매우 능동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달라이라마가 방문을 하려고 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허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중국측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에게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 달라이라마의 방안을 하락하게 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한관계에는 그다지 큰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양국간의 협력과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렬: 오늘 주제가 중·미 또 남북관계를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국 대표단께 개인적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남북관계의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미관계가 경색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의 진전관계를 중지시킨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통해서 미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중단시킴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

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분리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보다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군사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협력체제 구축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남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도, 남한지역도 매우 가물기 때문에 올해 북한은 1997년이래 아마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이 농업문제협력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보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금년도 식량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위원회를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분리해서 각각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국신: 저희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측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측의 평가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초강대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미국인 학자의 발언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을 공격할 만한 미사일도 없고 핵무

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군사력이나 국력이 총체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핵이나 미사일 공격력도 못 가진 일본을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 위협 하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도덕적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중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席來旺: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D문제는 이미 오전 회의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여야 할 것은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MD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별명을 하더라고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문제는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문제는 매우 특수합니다. 첫번째 일본이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데는 역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은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이 윈-윈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도우면서도 일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위협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매우 명확한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은 모든 중점을 경제 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처럼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확실히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대만독립세력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전략은 방어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각 나라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해외 주둔군을 파견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순수하게 자위적인 입장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여기에 인도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인도적인가 비인도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歐陽立平: 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다음 번에 미국측과 회의를 할 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국민들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과연 일본을 위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의 보호 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공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중국위협론이나 중국의 군사비 증가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총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군사비 증대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좀더 높인 데 기인합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비의 증대는 이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중국의 국방부담이 얼마나 큰 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접해 있습니다. 대만을 예로 들어보면 중국과 대만의 국토와 군비 및 군인급료를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중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군사비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席來旺: 이것이 바로 중국이 NMD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냉전 후에 힘들게 얻은 평화와 발전의 추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냉전시기에는 각국간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킬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은 국가 발전의 중점을 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NMD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가 다시 역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NMD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부강해지기를 원하며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NMD 추진을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국신: 한국 사람들도 NMD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와 같이 대만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이 TMD만을 개발할 경우 중국이 비판할 근거가 있습니까?

席來旺: 우선 이 문제는 국제적인 경제발전 추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만문제가 포함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歐陽立平: 미국은 북한에 MTCR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TMD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MTCR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중국측 참여자들과 연구원 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한·중워크샵을 마치겠습니다.